

## 정보통신윤리교육, 그 기독교사회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문 시 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 I. 들어가는 말: Log On

### II.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현상적 이해

### III. 기독교사회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1.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윤리에 관한 성찰
2. 심리적, 사회병리적 요소에 관한 성찰
3. 사이버 책임에 관한 윤리적 성찰

### IV. 나오는 말: Log Off

---

\* 이 논문은 2005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 ABSTRACT •

---

Even though in our times, e.g. informational society, to upright cyber ethics is urgent and important task, the process of ethical thinking could not be omitted and simplified. Unfortunately, education of cyber ethics in Korea tends to oversimplify ethical reflections. This paper studied on problems of cyber ethics education from perspective of Christian social ethics. This paper has two parts of studies : analysis of phenomenal aspects of cyber ethics education, proposals based on Christian social ethics for developments of it.

Now, this paper analysed the problems of cyber ethics education as follows : (1)the shortage of ethical reflections on the most important question, 'why be moral in cyber space?' (2)some misunderstanding of ethical terms. (3)the simplification cyber ethics to netizen or user's morality. On these analysis, this paper suggested three point of complement. First, social and structural concern about cyber space. Second, psychological and socio-pathological approach to cyber. And third, uprighting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in cyber.

**Keywords:** Cyber ethics, Social Approach, Christian Responsibility.

---

## I. 들어가는 말: Log On

사이버스페이스에 ‘로그 온’하는 일은 일상의 한 부분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존재규정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윤리위기에 관한 논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 기일 듯싶다. 특히 정책당국과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해 합의를 맺기라도 한 것처럼 공통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sup>1)</sup> 아쉬운 것은 윤리이야기가 실천 교육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윤리학적 사유의 깊이가 생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글은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윤리학적 성찰의 시도이다. 특히 윤리학적 사유가 생략되거나 단순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보완해야 할 사항과 지향해야 할 목표들에 관한 하나의 시론이며 제안이다. 말하자면, 이 글은 우리사회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독교적 통찰을 기초로 그 보완사항들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 II.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현상적 이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는 개념은 토론의 여지없이 일상화되고 굳어진

1) 정보통신윤리라는 용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정보’와 ‘통신’ 및 ‘윤리’와 ‘교육’이라는 각각 의미있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다양한 학문사이의 협력이 응축된 용어인 동시에 각각의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즉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지니는 다층적 구성요소의 반영인 동시에 증구난방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것은 정보통신윤리를 누가 가르치고 연구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 묻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누구도 날 때부터 윤리교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윤리교사가 되어야 마땅하다. 분명한 것은 윤리학이 존재하는 한, 윤리적 사유와 윤리적 응용을 위한 논의에서는 윤리학적 배경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도 상식이나 개인의견수준의 윤리관을 넘어서 윤리학 이론이 심층적으로 반영되고 적절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현상적으로 분석하고 그 아쉬움들을 지적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윤리적 성찰의 과정이 단순화 또는 생략되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인들도 고르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보사회에 대한 개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사회학, 컴퓨터와 인터넷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수준의 기능소양교육, 네티즌들의 생활태도와 실천규범을 다루는 네티켓 등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윤리적 질문이 상당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기본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좀 더 성찰할 필요가 있다.

- 원칙 1.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기보다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함양 및 가치관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함께 이루어

져야 하는 생활교육이다.

원칙 2. 정보와의 역기능현상은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엄연히 범법행위임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화의 역기능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식변화를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아니라 정보화의 역기능현상으로 나타난 행위는 엄연히 범법행위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범죄행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처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3.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실천교육이다. 단지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여 이성적으로만 옳고 그름을 인지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sup>2)</sup>

이 원칙들은 상당부분 현장에서의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또한 포괄적인 윤리적 원칙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원칙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인간 존중의 자세를 지닐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의 이용 가치나 효율성에만 매달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가 쉽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보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

---

2) 이 자료는 [http://210.179.120.100/good/good\\_net\\_1.htm](http://210.179.120.100/good/good_net_1.htm)에서 참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cc.or.kr/>의 '정보통신윤리교육'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음.

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정보가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분별력을 지닐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구성원 각자가 정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 사회에서는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익명성이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통신을 할 때에 상대방은 나의 ID만 알고 있을 뿐, 내가 누구인 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쉬워진다. 가상 공간에서의 욕설이나 비방, 음란한 대화, 악성 바이러스 유포 등은 바로 이러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정보 사회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많이 발생할수록 그 피해는 모두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율적인 행동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의 제공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 만약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인 자세로 생활을 한다면, 정보를 제공하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맡겨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한 삶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자율성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회이며, 정보 사회에서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행위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교육하여야 한다.

넷째, 공동체 의식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 사회에서는 고립된 개인주의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많다. 타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신만의 공간 속

에서 컴퓨터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 뿐 공익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점차 소홀해지기가 쉽다. 특히 PC 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가상공간은 시공을 초월한 문화 공간이며 풍부한 정보와 자유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전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지구촌 전체 구성원들을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공동체 의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sup>3)</sup>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기본원칙과 교육목표가 표방하는 바는 전체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아쉬움이 남는다. 그 하나는 원칙자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내용의 문제이다. 우선, <원칙 1>에서 전반적으로 가치관교육을 표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깊이 있는 윤리적 사유가 부족해 보인다. 상당부분 실용적(pragmatic)라는 인상이 든다. 또는 윤리적 이론에 기초한 실천적(practical) 대안이기보다 다분히 법률적(legal)이다. 혹은 대중요법이거나 현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원칙2>와 <원칙3>에 윤리적 성찰이 충분히 진행된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정보화의 역기능현상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도 분명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범법행위한 것도 분명하지만, 윤리적 성찰의 과정이 생략되고 법률에 직접 호소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원칙에서 말하고 있듯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지식의 전달이나 이성적 판단의 문제이기를 넘어서는 실천교육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천교육을 위해 거쳐야 할 윤리학적 성찰이 생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이 기본적으로 윤리적 질문을 던져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정보통신윤리에서 질문

3) 위와 동일한 출처에서 참고하였음.

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왜 윤리적이야 하는가?' (Why be moral in cyber space?) 사회적 범법행위는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법률에 호소하기 전에 윤리적 성찰이 기초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편견, 즉 표현의 자유공간이며 도덕적 해방구라는 생각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임시변통적인 강좌나 과목이 아니라면, 이른바 정보통신윤리교육 역시 분명한 학문적 정체성을 요청한다. 지속적인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현상들에 대한 원칙적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지침서들은 이 부분이 약하다. 물론 학문적 정체성을 말할 때, 특정 학문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다. 필자가 보기에,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토대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급조된 학문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령,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안한 정보통신 윤리의 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해주는

치방윤리(prescriptive ethics)

둘째,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윤리(preventive ethics)

셋째, 정보화에 따른 경험 및 제도의 변형을 요청하는

변형윤리(transformative ethics)

넷째, 세계보편윤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윤리(global ethics)

다섯째, 인터넷과 관련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윤리(responsible ethics)

여섯째, 인터넷 관련 도덕문제에 도움되는 이론들의



### 종합윤리(comprehensive ethics)<sup>4)</sup>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와 그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의식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윤리개념의 응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개념들이 눈에 거슬린다. 처방윤리라는 단어가 굳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윤리학에서 말하는 규정주의(prescriptism)를 원용하는 것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예방윤리란 무엇이며 변형윤리란 무엇인가? 그 개념들은 과연 윤리학적 성찰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사용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보통신윤리의 개념들이 어설픈 종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윤리학의 고유한 학문적 개념과 흐름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정보통신윤리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다. 사이버윤리, 인터넷윤리, 컴퓨터윤리, 디지털윤리 등 다양한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보통신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만일 관련정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의 명칭에 맞추려했다면, 억지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컴퓨터를 1세대로부터 단계별로 설명하는 방식을 따라 그 윤리 역시 1세대, 2세대 운위하는 것<sup>5)</sup> 역시 억지스럽다. 윤리는 윤리이지 컴퓨터 발전세대를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일선교육현장에서 과연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묻는 것 역시 넌센스이다. 새로운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윤리교육 안에서 충분히 해소가능한 문제를 굳이 위인설관(爲人設官)하는 격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전문용어나 기술적 지식에 관한 이야기에 해당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공학도의 전매특허가 될 필요는 없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오히려 학제적이어야 하며, 많은 사람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윤리」(이한출판사, 2005) 45-46면

5) 같은 책, 38-44면

들이 윤리적 사유를 토대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통신윤리는 응용윤리(applied ethics)의 한 분야이다. 그것은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몫도 아니고 특수한 영역, 즉 사이버스페이스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도덕이 아니다. 무어(James Moore)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사용 사이에는 윤리적 간격이 상존하지만, 컴퓨터에 능숙해지는 만큼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sup>6)</sup> 이점에서, 필자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기술차원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정보통신윤리를 구성하는 여러 축 가운데 사용자의 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네티켓교육에 집착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지침서나 학생용 교재들은 대부분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위한 정보통신윤리』의 목차와 구성내용을 보면, 과목명 자체를 <네티켓>이라고 붙이는 낯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정보사회란 무엇인가?

정보사회에서의 윤리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올바른 행동양식

올바른 통신용어 사용하기

개인정보 보호하기

6) Baird. R. M., Ramsower. R., Rosenbaum. S. E., ed., *Cyber Ethics; Social and Moral Issues in the Computer Age* (New York; Prometheus Books, 2000) p.11

인터넷중독 예방하기

불건전정보 차단하기

사이버성폭력 예방하기

깨끗하고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하여<sup>7)</sup>

이러한 교과학습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기기의 종류에 대한 소개와 컴퓨터 기초작동법 등 기능교육에 치우친다는 인상이 든다. 필자가 보기에 컴퓨터를 비롯한 기초기능에 관한 교육은 컴퓨터 과목에 맡기는 것이 옳다. 컴퓨터 구동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굳이 정규교육을 통하지 않더라도 상당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별도의 교과나 강좌가 된다면, 이러한 기능적 접근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하게 조사된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적절하다.

또한, 정보에는 사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있고, 관련정책은 영자가 있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의 구현은 이러한 여러 축이 각각 해야 할 몫을 충분히 감당할 때 가능하다. 물론, 네티켓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교육의 대상을 고려할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당장 정보 제공자나 정책담당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네티켓교육이 가장 현실적인 교육의 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보사용자는 항상 수동적 사용자로 머물지 않으며, 작은 단위의 정보제공 및 유포의 주인공이며, 그들이 곧 정보사업자가 될 후보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보기에, 네티켓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획, 「청소년을 위한 정보통신윤리」(한국경제신문사, 2002) 참조. 그 외 교재들에 대한 자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의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참고할 수 있음.

순진하게(naive) 보는 것이다. 네티켓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손쉬운 것인 동시에 단편적이고 현상적이며, 일종의 대증요법이다. 네티켓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티켓만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완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네티켓 문제는 윤리의 문제라기보다 정책과 제도의 문제일 지 모른다. 네티켓은 전자커뮤니티의 자율성과 익명성을 전제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한동안 사회적 논란이었던 실명제를 채택할 경우, 괄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일 실명제 도입을 IT강국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연기해야 한다는 정책적 계산이 작용했다면, 오히려 그 정책에 관한 사회윤리학적 평가부터 새롭게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네티켓이 정보통신윤리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네티켓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일이 더욱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즉흥적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응법을 생각해 보자. 네티켓을 지켜가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심층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회적 이슈나 공동의 문제에 대한 반응에서 감정에 휩쓸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분명한 자기의견을 정리할 필요성을 가르치는 일도 소중한 부분이다.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선택에 관한 시민윤리교육과 함께 선동정치에 대한 식별력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 III. 기독교사회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시간과 공간을 인식의 조건으로 규정하였던 철학자들의 관점을 응용하자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는 인간의 존재규정의 조건이다. 현대인의 삶에서 인터넷은 사이버 선거홍보, 의료진의 온라인 진료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분야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고 있다. 기독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이버교회의 등장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독교의 신학적 이론적 지식을 비롯한 정보들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기독교적 버전을 제시할 거창한 의도는 없다.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기독교인 역시 학습대상자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통찰의 예를 제안할 뿐이다.

#### 1.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윤리에 관한 성찰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사회윤리학적 성찰이다. 특히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까지 정보화의 문제에 관한 신학적 성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신학적 관심들이 모여져 세미나와 연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굳이 차별성을 찾는다면, 사이버스페이스의 본질과 그 사회적 지평에 관한 기독교적 논의를 착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들이 정보화에 대한 지식의 나열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기술(技術)에 대한 기술(記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기능적인 용어의 설

명이나 이미 보도된 자료의 인용, 그리고 공학적 관점에서의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다. 필자 역시 그 부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나열식 연구들이 과연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발전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에게는 사이버스페이스로 상징되는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구조와 본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설명이 미흡하다. 현실적으로, 서점에 등장한 자료들의 대부분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몇 안 되는 연구서들이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해준다. 그중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분석에서 사회구조와 권력의 문제를 제기한 조던(Tim Jordan)의 제안은 매우 성공적이라 하겠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모든 삶과 맞닿아 있다고 전제한 조던은 사이버파워(cyber power)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한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에 사회적 짜임새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 가상의 엘리트가 나타나며,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sup>8)</sup>

조던에 따르면, 사이버스페이스는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전자공학적 세계 속에 존재하며, 흔히 가상세계로 지칭된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물리적 신체를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우리의 육체가 제거되는 것이라기보다 재창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순수한 정신적 영역이 아니며, 물리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육체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비물리적 공간의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더구나 정보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다양한 버전 속에 살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구조는 미래에 도래할

8) Jordan. Tim., Cyberpower, 사이버문화연구소 역, 「사이버 파워」(현실문화연구, 2002) 226면

9) 같은 책, 8-9면

사이버스페이스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0)</sup> 사회가 그러 하듯 가상사회 역시 정치, 테크놀로지, 문화패턴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sup>11)</sup> 예를 들어, 사이버스페이스는 해커나 정책당국 등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자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마련이며, 그 결과 기술적 전문지식 혹은 전문지식에 대한 통제력에 따라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위치에 배치하 기도 한다.<sup>12)</sup>

이러한 의미에서, 조던은 사이버파워(cyber power)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것은 사이버스페이스와 인터넷상의 정치 및 문화를 구조화하는 권 력의 형태로 보자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개인적, 사회적, 상상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영역은 상호연관되어 있다. 개인적 사이버파워는 사이버 구현능력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소유물로, 사회적인 사이버파워는 권력의 지배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상상적 사이버파워는 사회질서의 구성요인으로 나타난다.<sup>13)</sup> 다시 말해 사이버스페이스는 개인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파워는 이용자 개인에게 자신의 소유 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도구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개인은 이 도구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전문가와 사이버엘리트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사이버파워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 엘리트와 민중 사이의 항구적이고 복잡한 갈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14)</sup>

조던의 제안은 기존의 나열식, 유사반복적 연구들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본질을 사회적 구조의 관점에서 해석 하고, 거기에 내재하는 권력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조던의 주장은 정보통신윤리의 지평확대 및 심층적 연구의 가능성을 충

10) 같은 책, 43면

11) 같은 책, 9면

12) 같은 책, 280면

13) 같은 책, 32면

14) 같은 책, 17면

분히 보여주었다. 분명 사이버 공간도 하나의 사회이다. 현실공간의 반대 개념이라는 생각에서 단지 가상의 공간이라고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사회의 외연이 넓어진 사회적 관계의 확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 공간은 주체이면서 객체인 행위수행자들의 상호작용의 공간이다.<sup>15)</sup> 이러한 의미에서 사이버 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사회윤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네티켓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혹은 그것이 전부일 것이라는 편견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필자는 다시한번 강조한다. 정보통신윤리에서 진행시켜야 할 문제들은 심층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으며 그 지평은 사용자 개인의 인터넷 예절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해 사이버스페이스의 본질에 관한 심층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노력이 요청된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인터넷 범죄행위들은 그야말로 법률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가상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본질적 이해를 통한 접근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간의 죄성과 본질에 기초하여 사회구조적 문제를 탐구해온 기독교사회윤리학적 연구가 이 부분에서도 심층적인 연구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2. 심리적, 사회병리적 요소에 관한 성찰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두 번째 사항은 심리적이고 사회병리적인 요소에 관한 성찰이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보통신

15) 박창호, 「사이버공간의 사회학」(정림사, 2001) 71면



신윤리교육과 관련하여 인간의 죄인으로서의 본질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바벨탑을 통해 원초적 죄성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대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적이고 정신병리적 현상들에 대한 신중한 성찰이 요구된다. 누군가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병리현상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정보격차의 강화, 상업화의 강화, 그리고 소외의 강화를 이야기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비록 제목에 걸맞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것이 흠이지만,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추가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 사이버스페이스가 과연 표현의 해방구이며 자유의 장인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포스터는 정보의 양식을 역사적으로 구분하면서 각 단계별 의사소통의 주체 또는 자아에 대한 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구어단계(oral stage)에서 의사소통의 주체는 대면적 관계 속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인쇄단계(print stage)에서는 합리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해진 기능수행에 그치는 대행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자단계(electronic stage)에서 자아는 끊임없는 불안정 속에 탈중심화되고 분산된 주체로 설명된다.<sup>17)</sup> 특히 전자단계에서 언어에 갇힌 주체를 언어 밖으로 탈출시켜 보다 자유롭게 만들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 당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 확대는 이미 헤겔(Hegel)도 이야기했던 주제이지만, 사이버스페이스까지 확장된 자유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16) 박정하,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토대로서의 사이버 사회봉사”, 이상훈 외 공저 「사이버생활양식에서 공공성 문제」(철학과 현실사, 2005) 116-119면

17) M. 포스터, 김성기 역, 「뉴미디어의 철학」(민음사, 1994) 22-23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루빈(Richard Rubin)의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이 지니고 있는 일곱 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sup>18)</sup> 첫째,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정보수집과 전달의 속도, 둘째,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흥분감을 동반한 프리이버시와 익명성, 셋째, 매체 본질상 정보접근에 대한 흔적도 없고 정보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점, 넷째, 해커를 포함하여 기술상의 문제해결에서 오는 심미적 매력, 다섯째,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여섯째, 단기간에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일곱 번째,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오용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루빈의 설명을 응용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심리적이고 사회병리적인 관점들이 적절히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보통신윤리의 문제들은 윤리학의 문제인 동시에 정신위생적 요소들을 내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말할 것처럼, ‘네트웍’, ‘컴퓨터’, ‘시스템’ 등 우리시대 키워드의 마지막은 언제나 ‘마음’이라는 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지 탐구해야 할 것이다.<sup>19)</sup> 사이버스페이스를 스트레스 해소를 통로로 간주하거나 표현의 자유공간이나 해방구에 들어온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현대인의 정신위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것은 사이버스페이스가 일종의 해방구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을 요청하는 부분이다. 동시에 인터넷의 사유화, 정치적 이용을 극히 경계하여야 한다. 정치와 사회는 이벤트이거나 그들만의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선동정치와 감성정치를 위한 도구로

1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윤리」, (이한출판사, 2005) 36-37면에서 재인용

19) 윤완철,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영향” 「사이버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제21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집, 2004) 7면

전락시키려는 알뜰한 정치적 실험장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사회병리적인 요소들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주는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 3. 사이버 책임에 관한 윤리적 성찰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셋째 조건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책임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윤리적 모색이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술시대를 위한 책임의 문제를 사이버스페이스에도 본격적으로 적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과정에서 땅 끝의 개념에는 현실공간에서의 그것과 함께 가상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sup>20)</sup> 그러나 이것은 사이버스페이스 그 자체가 기독교의 지상명령의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기독교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컴퓨터 자체가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고 했던 스캔란(Michael Scanlan)의 주장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도덕적 의도를 지니고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1)</sup> 바람직한 것은 사이버스페이스가 인간번영 실현의 기초가 되는 도덕적 선과 가치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의 암호체계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관이 사이버공간의 규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관의

20) 정충영, “로고스 경영 관점에서 가상교회는 가능한가?” [http:// gamma. kiu. ac. kr](http://gamma.kiu.ac.kr)에서 인용.

21) Baird. R. M., Ramsower. R., Rosenbaum. S. E., ed., *Cyber Ethics; Social and Moral Issues in the Computer Age* (New York; Prometheus Books, 2000) p.11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테크놀러지시대를 위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역설한 요나스(H. Jonas)의 책임윤리 구상은 좋은 통찰을 줄 것이다. 그는 테크놀로지를 인간의 행위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해주는 힘(Power)이라 보았다. 요나스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는 인간행위의 본성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의 힘을 미래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그 결과 행위의 영향력이 그 범위와 대상을 확정,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그는 책임의 범위를 인간과 생태계에까지 확장하고 그 시제 역시 미래세대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요나스의 시도는 책임의 지평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으로 확장시키지 못했다. 그 지평의 확장은 슈바이커(W. Schweiker)에게서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테크놀러지의 발전으로 인간의 힘은 너무 강하게 확장되었다. 그 증거들은 정보화 및 경제적 상호의존, 환경위기, 그리고 대량학살의 위험성 등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sup>22)</sup> 문제는 힘의 확장 또는 증대만 있을 뿐 그 적절한 책임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힘의 사용을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하나님 앞에서 삶을 존중하고 함양하려는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크놀러지의 힘은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공동체의 통전성이 유지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통전성을 존중하고 함양하라는 책임의 정언명법을 제안한다.<sup>24)</sup>

이러한 기독교적 책임의 통찰을 우리 이야기에 적용시킬 때가 되었다.

22) W. Schweiker,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Ethics*,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대한기독교서회, 2000), 44-49면

23) 같은 책, 46면

24) 같은 책, 60면

테크놀러지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규정이 양식이다. 이러한 때에 요청되는 것이 책임의 윤리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그 자체는 고정불변의 절대적 가치담지자일 수 없다. 서비스이며 정보유통의 통로일 뿐이다. 좁게 보면, 몇몇 사람들을 위한 수익모델이거나 그들의 직업이자 영업의 장일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능한 것은 모두 만들어야 하겠다는 상업적 기획을 버리고 인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정부와 기업과 기술자들의 책임의식이 요청된다.<sup>25)</sup>

그렇다고 사이버를 죄악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도피하지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새로운 선교의 수단이며 공간일 수 있다. 정보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능력을 활용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사회로서,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지닌 사회이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sup>26)</sup> 책임의 윤리가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성에만 공감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를 위한 책임의 윤리를 세우는 노력을 통해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구현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IV. 나오는 말: Log Off

정보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의 생활양식이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그 오프’ 상태에서 요청되는 책임의 윤리를 사이버스페이스 ‘로그 온’ 상태에서도 바르게 구현할 대안의 모색이다. 물론, 윤리의 위기가 팽배한 ‘오프 라인’에서조차 윤리가 문제시 되는

25) 윤완철,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영향” 「사이버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제21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집, 2004) 20면

26) 이승구,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사이버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제21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집, 2004) 34면

시대에, 과연 ‘온 라인’에서 윤리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대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에 요청되는 윤리를 세우는 일은 시급하고도 긴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에게는 윤리가 필수적이며,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인간의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윤리 혹은 정보통신윤리는 전혀 새로운 창작일 수 없다.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부여되는 질문,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는 사이버스페이스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윤리학의 근본질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은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명분으로 급조되거나 윤리적 사유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통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을 위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이 현상적이고 대증요법에 치우친 네티켓교육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비전을 포함하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윤리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K C I

## 참고문헌

- Baird. R. M., Ramsower. R., Rosenbaum. S. E., ed., *Cyber Ethics; Social and Moral Issues in the Computer Age* (New York; Prometheus Books, 2000)
- J. Ellul, *Le système technicien*, 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천안:한국신학연구소, 1995)
- H.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이진우譯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책임윤리” 서광사, 1994)
- E. L. Long. Jr., *A Survey of Recent Christian Ethics* (Oxford Univ. Press, 1982)
- W. Schweiker,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Ethics*,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대한기독교서회, 2000)
- 문시영, “테크놀로지 시대의 사회윤리구상”, 「기독교사회윤리」(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1)
- 윤완철,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영향” 「사이버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제21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집, 2004) 20면
- 이승구,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사이버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제21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집, 2004) 34면
- 정충영, “로고스 경영 관점에서 가상교회는 가능한가?” [http:// gamma. kiu. ac. kr](http://gamma.kiu.ac.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윤리」, (이한출판사, 2005)
- M. 포스터, 김성기 역, 「뉴미디어의 철학」(민음사, 1994)
- 박정하,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토대로서의 사이버 사회봉사”, 이상훈 외 공저 「사이버생활양식에서 공공성 문제」(철학과 현실사, 2005)
- 박창호, 「사이버공간의 사회학」(정림사, 2001)
- Jordan. Tim., *Cyberpower*, 사이버문화연구소 역, 「사이버 파워」(현실문화연구, 200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획, 「청소년을 위한 정보통신윤리」(한국경제신문사, 2002)
- \* 인터넷 자료는 주로 [http://210.179.120.100/good/good\\_net\\_1.htm](http://210.179.120.100/good/good_net_1.htm)에서 참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의 ‘정보통신윤리교육’ 부분에서 참고하였음.